

통합교육감 선출…통합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가닥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3차 간담회

광주·무안·동부 3청사 운영…주 사무소는 전남
27일 최종 확정…행정·교육 공무원 신분 보장
AI·반도체·공공의료 등 특별법 특례 대거 논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데 1차 합의하고, 주 사무소는 전남에 두되 광주·무안·동부권 3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요 사안은 27일 열리는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8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명칭과 행정체계, 공무원 인사·교육 문제, 분야별 특례 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지자체 명칭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양 시·도는 ‘확정’ 대신 1차 가안 형태로 ‘광주전남특별시’에 의견을 모았다. 명칭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판단이다.

통합 지자체의 행정체계와 관련에서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법적 주소지와 공식 주 사무소는 전남에 두기로 합의했다. 행정 가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광주와 전남이 역할을 분담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통합과 관련에서는 오는 6월 지방 선거에서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반직과 교육 공무원 모두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담기로 했으며, 학군 역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통합 교육감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1차 합의했다. 공직자들의 인사교류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신분을 보장한다’로 문구를 강화해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담긴 분야별 특례 사항에 대한

▶관련기사 8면

▶관련기사 8면